– 최종보고서 –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 탐구:
학교–지역사회의 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2023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조 현 정

통일부장관 귀중

목 차

요약문 ····· 5

Ⅰ. 서론 ····· 6
1. 연구의 필요성 ····· 6
2. 연구목적 및 내용 ····· 10
3. 연구방법 ····· 11

Ⅱ. 북한의 시장·경제적 계층분화에 따른 교육불평등 ····· 14
1. 부모의 계층 지위에 따른 사회불평등과 교육의 관계 ····· 14
가. 사회불평등과 계층으로서의 가정 요인 ····· 14
나. 사회계층 변화와 부모의 경제·사회자본 ····· 15
다. 사회불평등 재생산 도구로서의 교육 ····· 17
2. 부모의 사적 욕망에 따른 교육 경쟁 ····· 18
가. 사적 욕망의 분출과 계층 이동 ····· 18
나. 부모의 교육열에 따른 교육경쟁 ····· 19

Ⅲ. 북한의 학교–지역사회 차원의 도·농간 교육격차 실태 ····· 22
1. 지역사회의 형식적 학교지원과 교육개혁의 답보 ····· 21
가. 지역사회의 학교지원 양상 ····· 21
나. 농촌 학교 방치로 인한 교육의 악순환 ····· 27
2. 지역경제에 따른 학교의 교육수준 차이 ····· 30
가. 지역사회 지원이 아닌 학교의 학생 수 중요 ····· 30
나. 도시와 농촌 학교의 학부모 의식 차이 ····· 32

Ⅳ. 북한의 교사–학부모 차원의 도·농간 교육격차 실태 ····· 43
1. 교사–학부모 접촉 빈도에 따른 상호 의존 양상 ····· 33
가. '내 자녀를 잘 내세우고 싶은' 부모의 욕구 ····· 34
나. 교사–학부모 접촉 빈도의 변화 ····· 35
2.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사 역량 차이 ····· 38
가.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사 자격 문제 ····· 38

나.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사 자질 문제 ····· 39

Ⅴ.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한 탐색적 의미 ····· 41
1. 교육개혁의 근본적 문제: '도와주는 관점'의 학교지원 ····· 41
2. 지역 간 불평등 문제: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감소 ····· 44

Ⅵ. 결론 ····· 45

참고문헌 ····· 48

<표 목차>

<표 Ⅰ-1> 연구참여자 특성 ····· 21
<표 Ⅰ-2> 연구참여자 유형별 분포 ····· 21
<표 Ⅰ-3> 연구참여자 거주지역별 분포 ····· 21
<표 Ⅰ-4> 교사 질문지 ····· 31
<표 Ⅰ-5> 학부모 질문지 ····· 31
<표 Ⅱ-1> 사회계층과 교육의 관계 ····· 61

[그림 목차]

[그림 Ⅰ-1]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 연구 모형 ····· 9
[그림 Ⅰ-2] 단계별 연구범위 및 내용 ····· 9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 차원의 세 요인 간 상호 인과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지역사회, 교사-학부모의 인과적 관계는 시장화 진전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교육 사회 안으로 침투되면서 교육불평등으로 직결되었다. 또한 국가 교육재정 투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각 지방인민위원회의 인민적시책비에 의존하는 교육비 지출은 사실상 국가의 교육개혁 의도를 실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교육지원 해결책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기관·기업소에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역 일군들의 교육관심도, 지원 규모, 종류, 방법적인 면에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학교지원 정도는 미미하며, 실제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이다. 경제적 능력을 갖춘 학부모들의 학교 개입은 담임교사와 학교 행정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서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불평등으로 인한 지역 격차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취약계층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농촌과 산간, 해변 지역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시급하다. 둘째, 통일준비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교육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교육개혁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환경과 교수방법 개선 문제, 교사 양성 및 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차원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교류 협력은 통일과 남북한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점진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주제어: 북한 교육, 도·농간 교육격차, 학교-지역사회, 교사-학부모, 교육불평등, 사회불평등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인해 교육 결과의 격차로 표출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와 같은 현상은 통일의 대상인 북한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무료교육에 의한 평등을 주장했던 북한의 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 극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발전교육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불평등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 '평등 교육'에서 '수재 중심 교육'체계로의 교육정책은 시장화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경제적 계층의 교육열에 따라 지역별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은 '인구변화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생활수준 변화에 따른 지역별 빈부격차'로 나타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2]

그동안 북한은 도·농간 빈부격차에 대한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21년 1월에 열린 당 제8차 대회에서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 군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3] 있음을 재차 시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지도 일군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하려는 높은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지 못하는 데 대한 지적도 따르고 있다.[4] 2021년 6월에는 유엔에 공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혁신이 저조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문제를 상정하고 있다.[5]

1)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4호(2007), p. 127.
2) 임을출,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2016), pp. 98~114.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로동신문』, 2021년 1월 13일, 1면.
4) "교육혁명수행과 일군의 역할," 『로동신문』, 2021년 1월 21일, 1면.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6월.

지역 간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불평등 문제를 인정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을 당의 중요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고'[6] 있으며, 지역 간에 발생하는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는 것 역시 중대한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의 교원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농촌 학교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아낌없이 도와주며, 우수한 교수방법과 교수 자료들도 보급해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7] 또 각 지역 일군들이 당의 교육정책 관철에서 자그마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여 교육사업에서 어려운 고리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기풍을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은 낙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에 맞춰 교육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예산을 중앙대학과 특정 의의를 가지는 교육 부문에만 일부 지출하고, 지방대학과 지방의 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지방예산과 후원사업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9]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후원단체 역할을 무조건 해야만 했다. 따라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열성학부형이 되어 교육지원을 위한 애국사업에 실천으로 이바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지방 학교들의 교육사업을 국가 예산이 없이 지방예산과 후원으로 지원하다 보니 교육혁신을 위한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11]

그렇다면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사회의 제도적 측면과 지역사회 계층의 배경 구조 측면의 관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교육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사회문화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6)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로동신문』, 2022년 2월 9일, 1면.
7)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하는 것은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다," 『로동신문』, 2022년 6월 10일, 1면.
8) "지역의 교육발전과 일군들의 역할," 『로동신문』, 2021년 4월 26일, 4면.
9) 현인애, 「북한의 교육비와 교사충원에 관한 소고」, 『평화통일연구』, 2호(2020), pp. 11~12.
10) "인재와 학교지원," 『교육신문』, 2016년 3월 10일, 1면.
11) 조현정, "북한의 계층구조에 따른 교육격차 요인과 실태,"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은 체제 10년, 새로운 국가 전략』,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2), pp. 210~213.

얽혀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한 표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상호 인과적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조현정(2022)의 연구에서 계층구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을 뿐이며, 도·농간 교육격차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시초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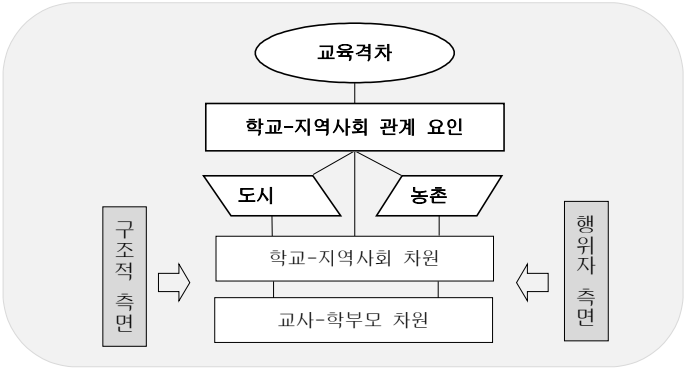
2. 연구목적 및 내용

위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복잡한 변수 중 지역 간 교육 수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 차원의 세 요인 간 상호 인과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착안한 위의 두 요인은 김병성(2021)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격차 결정요인 중 일부이다. 지역 간의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학부모 관여 정도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건의(접촉) 빈도이고, 지역사회의 지원 정도는 지역사회의 장학금 종류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활용 정도이며, 교사-학부모 협력 정도는 교사 및 교직원과 학부모의 접촉 비율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12] 본 연구는 김병성의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에 착안하여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 발생 요인에 적합한 연구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측면과 행위자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실제를 밝혀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Ⅰ-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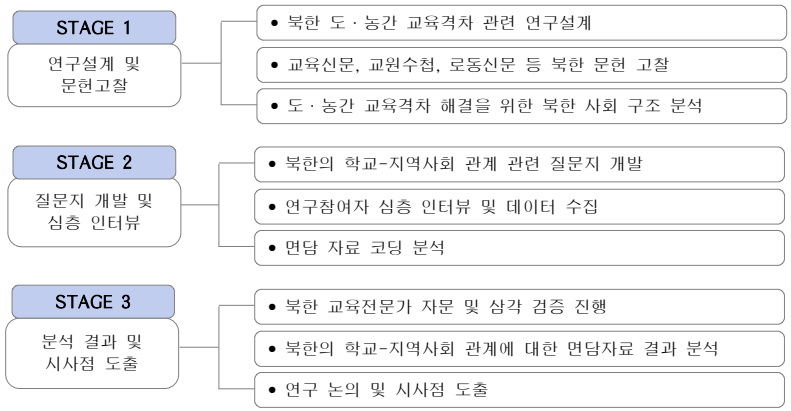
12) 김병성, 『교육사회학: 학교 사회-문화 분석, 3판』, (서울: (주)학지사, 2021), p. 231.

[그림 Ⅰ-1]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 연구 모형



위의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먼저 북한의 교육신문, 교원수첩, 인민교육, 노동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기관지를 통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학교-지역사회 관계 요인에 따른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교사, 학부모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심층면담에 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의 범위와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을 상술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Ⅰ-2] 단계별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단계별 연구내용에 따라, Ⅱ장에서는 사회불평등이 발생하는 근대 사회의 현상에 근거하여 북한의 시장·경제적 계층분화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교육사회학, 북한의 정기간행물(교육신문, 교원수첩, 로동신문 등), 국내 문헌을 고찰하였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실제로 북한의 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 도·농간 교육격차 실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교사, 학교행정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한 구술텍스트 분석 결과를 통해 학교-지역사회 및 교사-학부모 차원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맥락을 구조화하였다. Ⅴ장에서는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본질적인 탐색을 통해 지역사회, 학교, 교사, 학부모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실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Ⅵ장 결론에서는 대북 교육지원과 향후 북한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크레스웰(Creswell)에 따르면,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 기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13] 현상학적 연구의 대가인 반 마넨(van Maanen, 1990) 역시 '체험 연구하는 것', '의식에 나타나는 대로의 현상을 해명하는 것', '현상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 '체험적 의미를 우리가 겪은 대로 기술하

13)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 (2013).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8), p. 102.

는 것', '현상에 대한 인간과학적 연구' 등 그 특징에 대해 설득력 있게 규명하고 있다.[14] 이를 토대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인간의 체험과 그 체험 속의 의식현상, 구체적인 본질들을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사유에 기반하여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실천 행위자들의 대응 방식에 대한 경험적 기술이 가능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실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도·농간 교육격차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상에 대한 기술을 넘어 교육 행위자들의 대응 방식에서 발견되는 구조의 균열과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15]

나. 연구참여자 및 질문지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거주할 당시 교사, 학부모로서 지역사회에서 학교 지원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이다. 둘째, 2016년 이후 북한을 떠나 직행으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북한을 떠나 오랜 시간 제3국에 체류할 경우 북한에서의 경험을 자료화하는 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탈북민 커뮤니티, 탈북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졌다. 모집문건에 동의한 참여자들과 사전면담을 통해 선정조건에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표집 방법은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16] 여기서 거주지역별 특성은 연구참여자 모집의 한계로 인해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 기준에 따른 연구참여자는 현재 9명이다. 본 연구는 먼저 7명의 연구참여자와 면

1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8), p. 91.
15)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277.
1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6), p. 137.

담 일정을 약속하고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자료수집을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간보고 이후 데이터의 보완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2명의 연구참여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북한 거주 당시의 직업과 참여자 수는 교사 2명, 교직원 1명, 학부모 6명이다. 연구참여자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연구참여자 특성

No	연구참여자	탈북시기	입국시기	북한 거주지역	북한 거주 당시 직업	사회경제적 배경
1	참여자A	2019년	2019년	양강도	교사	중
2	참여자B	2016년	2016년	양강도	교사	중
3	참여자C	2019년	2020년	양강도	교직원	중하
4	참여자D	2020년	2020년	평양시	학부모/장사	중상
5	참여자E	2019년	2019년	양강도	학부모/장사	중상
6	참여자F	2019년	2019년	자강도	학부모/장사	중상
7	참여자G	2019년	2019년	양강도	학부모/장사	중
8	참여자H	2018년	2018년	함경북도	학부모/장사	중상
9	참여자I	2018년	2019년	함경북도	학부모/장사	중

<표 Ⅰ-2> 연구참여자 유형별 분포

교사	교직원	학부모
2명	1명	6명

<표 Ⅰ-3> 연구참여자 거주지역별 분포

양강도	함경북도	자강도	평양시
5명	2명	1명	1명

본 연구는 북한의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와 경제불평등 분석을

위해 먼저 근대 사회의 교육사회학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 교육 관련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북한의 교육신문, 노동신문, 사회주의교육학, 북한법령집, 교육정책 등을 통해 학교지원 현황과 도·농간 교육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 중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비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고, 면담 과정에 나오는 내러티브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심층 질문을 추가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비구조화 질문은 다음의 <표 Ⅰ-4>, <표 Ⅰ-5>와 같다.

<표 Ⅰ-4> 교사 질문지

1.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2.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인과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선생님의 학교가 있던 지역사회의 당일군들의 교육지원 정도는 어떠했나요?
4.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은 지방예산과 후원사업으로 충당하라고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예산과 후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5. 지역의 학교 후원단체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6. 당일군들의 교육지원은 애국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일군들이 교육지원을 잘 하고 있나요?
7.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 지원이나 활용정도는 어떠했나요?
8.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접촉하는 빈도는 어떠한가요?
9. 교사와 학부모과의 협력정도는 어떠했나요?
10. 교사들은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어떤 후원을 해주고 알고 있나요?
11.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 Ⅰ-5> 학부모 질문지

1. 자녀의 학교지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2. 교장, 부교장, 교감 등 학교 행정가들을 자주 만났어요? 만났다면 어떤 일로 만났나요? 안 만났다면 만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학부모로서 학교 담임과 다른 교육행정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4.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후원사업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겠어요?
5. 지역에서 학교 후원단체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나요?
6.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교사들과 협력정도는 어떠했나요?
8.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접촉하는 빈도는 어떠한가요?
9.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 지원이나 활용정도는 어떠했나요?
10.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인과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Ⅱ. 북한의 시장·경제적 계층분화에 따른 교육불평등

1. 부모의 계층 지위에 따른 사회불평등과 교육의 관계

가. 사회불평등과 계층으로서의 가정 요인

로크(Locke)와 루소(Rousseau)에 따르면, 사회의 불평등 및 격차의 문제는 자연법칙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 즉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보았다. 한편 마르크스(Marx)는 생산양식에 의해 불평등 문제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막스 베버(Max Weber)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권력(power)과 권위(prestige) 개념을 더해 자본의 격차는 계급의 격차로 이어지며 권력과 권위의 격차는 지위의 격차를 잉태하여 사회불평등과 격차를 극대화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개인이 가진 능력에 의해 교육차이가 발생하기보다는 가정의 사회계층 격차로 인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설득력을 가진다.[17]

서구와 근대 사회의 가정에서 발견되는 계층 지위와 그에 따른 경제·사회자본으로 인한 빈부격차는 사회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가정의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가정요인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회에서 일정한 권력과 지위를 획득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부류에 맞는 사람들끼리 왕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사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사회계층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사회계층의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관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기능주의 관점에서 계층은 보편적·필연적이며, 통합·조정·응집을 위한 사회적 욕구에서 생겨나며, 사회와 개인이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촉진한다. 반면 갈등주의 관점에서의 계층은 보편적이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와 개인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하며, 권력 집단의 가치를 표현하고, 일자

17) 김병성, 위의 글, pp. 177~178.

리와 보상을 불평등하게 배분한다.[18]

사회계층을 설명하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관점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며, 북한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70년 여년의 시간 동안 사회주의를 주장해온 북한은 평등사회를 지향했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계층(계급)은 이미 핵심·기본·복잡/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었다.[19] 북한의 사회계층은 그 지위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인정 또는 방해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와 보상도 불평등하게 배분받았다. 이는 북한 사회의 계층 역시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관점에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국가 공급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시기 북한은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우월성'과 '평등'이라는 패러다임을 세뇌시켜 주민들 자신이 위치한 계층에 불만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 자신의 계층 지위에 맞는 일자리와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이 주장했던 사회주의 우월성과 평등 패러다임에 대한 주장은 여전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행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와 함께 급격한 변화와 균열을 나타냈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계급)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은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는 가정의 경제력과 계층분화로 귀결되었다. 이렇게 북한의 하부 조직인 가정은 경제력의 힘(power)에 따라 그 사회를 지탱했던 기존의 계층구조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나. 사회계층 변화와 부모의 경제·사회자본

그동안 북한의 사회계층은 정치적 신분을 중심으로 계층 지위가 분류되었다.[20] 지금 현재도 북한은 정치적 신분을 우선하는 핵심 계층의 위력이 그대로 존재한다. 핵심 계층에 속하는 출신성분에 의해 당 간부가 양성·선발되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는 경제난 이전보다 더 막강해졌으며, 권력을 이용해

18) 김종두,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2023), pp. 236~237.
19)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212.
20) 조정아 외, 『일상생활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65.

부정부패의 중심에 서 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분배를 담당하는 국가 관료들은 특권층에 물자를 집중시키게 되고, 필요에 따라 뇌물수수, 횡령, 친족중용 등 부패가 자연스럽게 뒤따른다.[21] 핵심 계층일수록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윗선과 결탁할 수 있는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그 권력을 자녀에게 세습하기 위한 진로 설계까지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기본 계층과 복잡 계층에 해당하는 일반 주민들도 상황에 따라 사회의 부패구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시장화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난 새로운 계층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상류층·중류층·하류층·극빈층이다.[22] 상류층은 '신흥부자세력'으로써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이용하면서 정경유착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 속에도 시장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이 분화되고, 그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사회자본의 획득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나타났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와해와 시장경제의 진전은 인구변화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도시인구가 유전적으로 우수할 가능성), 생활수준 변화에 따른 지역별 빈부격차(가정환경이 우수할 가능성), 지역별 정보 불평등, 도·농간 빈부격차로 이어졌다.[23]

이 과정에서 부모의 계층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은 제도적 후원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획득과 축적은 부모-자녀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며, 그 수준은 문화자본의 획득과도 연관된다.[24] 결국 계층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맺어진 사회적 연결망은 부모의 사회자본과 자녀의 교육에 상호작용하는 반면, 계층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의 사회자본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21) 북한은 현재 정책결정자·관료의 부패, 시장부패, 재분배적 부패, 체제적 부패 등 복합적 부패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의 주요 형태와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2012년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북한의 부패지수는 8점으로 176개국 중 꼴지수준이다. (성채기 외, 2014. p. 162).
22) 김수암 외, 위의 글, p. 214.
23) 임을출, 위의 글, pp. 98~114;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97.
24) 허은주 외, 『현대 교육사회학』, (파주: 양서원, 2021), p. 124.

다. 사회불평등 재생산 도구로서의 교육

사회불평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구조에서 자신이 속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콜맨(Coleman)과 부르디외(Bourdieu)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어떤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성원의 능력이다.[25] 때문에 부모가 획득한 사회자본은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기회균등이나 평등,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갈등, 교육격차 등 불평등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26]

시장화 이후 형성된 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계층은 각 계층의 필요에 따라 교육을 계층 재생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과 사회계층에 대한 교육의 영향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먼저 교육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을 보면, 교육에 대한 열의와 기대, 교육기회, 학교 선택, 동료집단, 아동 양육에 대한 계층 차이가 심하다. 다음으로 사회계층에 대한 교육의 영향을 보면, 교육은 경제적·사회문화적 계층 상승 수단이 되며, 생활태도의 개선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사회계층 이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27] 이들 상호 간의 관계는 <표 Ⅱ-1>에서 상세히 구성하였다.

<표 Ⅱ-1> 사회계층과 교육의 관계

교육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	사회계층에 대한 교육의 영향
① 교육에 대한 열의와 기대에 대한 계층 차이 큼. ② 교육기회에 대한 계층 차이가 큼. ③ 학교 선택에 대한 계층적 영향이 큼. ④ 동료집단에 대한 계층적 영향이 큼. ⑤ 아동 양육에 있어 계층 차이가 심함.	① 교육은 경제적, 문화적 계층 상승의 수단이 됨. ② 교육은 생활태도의 개선과 가치관 및 신념을 변화 시켜 계층문화의 향상을 촉진하므로 사회이동의 요인이 됨.

출처: 김종두(2023).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253쪽(저자 재구성).

위의 <표 Ⅱ-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육은 결정적으로 사회계층별로 영

25) 김종두, 위의 글, p. 260.
26) 조현정, 위의 글, p. 192.
27) 김종두, 위의 글, p. 253.

향을 주기도 하고, 사회계층의 상승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은 사회계층의 이동을 꾀하는 중·상류층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그러나 하류층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생계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은 불필요하게 취급된다. 결국 교육은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는다. 교육과 사회불평등 문제가 계층 간에 야기될수록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조와 관계의 산물이며,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권리 침해 등과 연결되어 있다.[28]

2. 부모의 사적 욕망에 따른 교육 경쟁

가. 사적 욕망의 분출과 계층 이동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의 욕망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사적이다. 하지만 북한 사회는 예외적이었다.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했던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정체성을 내면화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삶의 이유였다. 물론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진학과 직업, 결혼 등 삶의 궤적이 결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복잡 계층에 속한 주민들은 드러내면 안 되는 내적 반감이나 불만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극심한 사회변화와 시장화 진전, 자본주의 가치의 유입으로 주민들의 집단주의 가치관은 '하루 한 끼라도' 굶지 않으려는 생존 경쟁으로 인한 개인적·독립적 생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논리로 무장했던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혼란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집단정체성으로 억눌려왔던 개인정체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29]

28) 최규빈 외,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불평등과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17.
29)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p. 116.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은 전통적(집단적) 가치에 대한 회의와 함께 개인적 가치를 우선하는 의식 변화를 동반했다.[30]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억눌려 왔던 개인적 욕구와 욕망의 분출이다.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상류층은 식생활, 고급 아파트, 외국제 의류 등 의식주의 만족과 동시에 자녀 교육에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하기 시작했다.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니 그 다음으로 자녀 교육을 통해 욕망을 표출한 것이다. 자녀 교육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류층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취학 전부터 국어, 영어,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갖가지 예체능까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경제력을 갖춘 북한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사회적 실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육투자라고 볼 수 있다. 중·상류층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녀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욕망을 충족하였다. 욕망을 표출함에 있어 정치 권력과의 타협적인 태도, 신분 상승의 욕구, 돈에 대한 욕구[31]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계층 이동이 발생하고 기존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다른 지위로 이동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나. 부모의 교육열에 따른 교육경쟁

워너(Warner)에 의하면, 학교는 계층 이동의 통로로서 교육이 사회에서 상승 이동의 가장 큰 통로이다.[32] 여기서 계층 이동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가든 개인이든 교육은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기능은 경제력을 가진 부모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현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2020년 합계 출산율 1.9명: UN통계치 기준)[33]

30) 박영자 외, 위의 글, p. 212.
31) 최완규 외,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2008), p. 99.
32) 김종두, 위의 글, p. 316.

에 영향을 받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생존 때문에 출산율이 낮았지만, 시장의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해결되면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겠다는' 식으로 자녀관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로 행위가 전환되었다.[34] 가정의 경제적인 기준이 높을수록 자녀를 1명 이상 낳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교육경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 잘 살수록 안 낳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북한도 한국하고 비슷해 가지고 대부분 도시에 가서 막 경쟁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경쟁심이 엄청 강하니까 애 둘을 낳으면 키우기가 힘들어요. 학교에서 내라는 게 우선 많고. 그리고 지금은 북한도 어떤 게 있냐면 내 동생도 (교원)하고 있는데 직접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 달에 달러로 얼마 주고, 달러나 이렇게 옛날에는 쌀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주거든요. 월급도 없고 배급도 안 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교원도)살아야 되니까. (참여자H).

> 다른 집 부모들 다 같아요. 진짜 솔직히 진짜 없는 서민 가정 내놓고는 애들이 하나니까 자기가 자기네가 못 쓰고 못 먹어도 애들한테 투자를 해요. (참여자E).

북한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경쟁적으로 동참하다 보니, 어느 정도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부모가 덜 쓰더라도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북한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 경쟁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만은 아니다. 경제적인 자본과 학력 수준이 갖추어졌을 때, 불법적인 '신분세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35] 물론 국가 고위 관료나 당 간부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더 필사적이다. 여기에 정치적 권력이 없는 부모들도 경제력이 갖춰지면 학령기 전부터 초·중등 교육, 대학진학, 졸업 후 진로까지 자녀 인생의 설계자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교육열은 그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공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인

33) 이용희, "북한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실태," 『통일전략』, 제21권 3호(2021), p. 90.
34) 조현정, 위의 글, p. 197.
35) 조현정, 위의 글, p. 204.

적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교육열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경쟁과 교육격차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36] 가정배경의 경제적(financial)·인적(human)·사회적(social) 자본(capital)은 부모의 물질적 능력과 교육 수준, 자녀에 대한 관심 형태로 발현되고, 이 세 요소는 결국 사회적으로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37]

Ⅲ. 북한의 학교-지역사회 차원의 도·농간 교육격차 실태

1. 지역사회의 형식적 학교지원과 교육개혁의 답보

가. 지역사회의 학교지원 양상

1) 학교지원에 대한 국가의 요구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지역사회와 밀착시켜 운영하는 것은 근대 사회의 발전과 연관성이 크다(김병성, 2012: 43). 북한 역시 학교지원을 애국으로 명명하고, 지역사회가 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과제를 밀어붙였다. 경제난과 시장화 진전이라는 극적인 사회변화에 큰 타격을 받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교육불평등,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와 같은 불균형적인 교육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국가적인 교육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해마다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지정하고 도·시·군 인민위원회들에서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한 컴퓨터, 액정텔레비죤, 시멘트, 목재, 유리 등의 물자를 보장해주도록 지역일

36) 조현정,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제53권 4호(2022), p. 125.
37) 김경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1호(2000), p.21.

군들의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38]

김정은은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도·시·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당 일군들이 국가의 교육중시 사상을 받들어 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후원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각 지역의 당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교육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인 구실을 다해나갈 때’ 학생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역군으로 더욱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다.[3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적 요구는 전사회적·전인민적으로 학교지원 사업에 집중하여 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는 것이다.[40] 지역사회 일군들과 노동자들도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 국가의 더 좋은 내일을 앞당겨 오기 위한 중차대한 과업이라는 자각을 가지도록 추동하고 있다. ‘무엇이 차고 넘쳐서, 뭐가 넉넉하여서’ 학교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고생하더라도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관점만 있으면 현대적 교육수단과 설비, 교구비품과 학용품, 참고도서, 목재와 세멘트, 유리를 비롯한 건설자재가 마련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더한 것도 나온다는 것이다. 북한은 교육을 농사에 비유하며 투자한 것만큼, 품 들여 키운 것만큼 인재의 숲이 무성해진다는 것이다.[41] 때문에 북한이 강조하는 학교지원은 단순히 학교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몇 가지 지원하는 데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잘 키워 인재강국, 경제강국, 과학문화 강국을 만들어가는 애국의 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의 생활 향상과 진흥을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우고 농촌 학교에 도시 학교의 우수교원 파견, 교육 단위들 사이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고조시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학교의 교육수준 제고에 전환을 가져올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42]

38)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교육신문』, 2017년 4월 20일, 2면.
39)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이 중요하다,” 『로동신문』, 2018년 10월 27일, 5면.
40) “학교지원사업에 적극 떨쳐나,” 『교육신문』, 2017년 6월 29일, 1면.
41) “학교지원과 애국,” 『교육신문』, 2015년 3월 5일, 1면.
42) “초등 및 중등교육의 강화는 인재강국 건설의 지름길,” 『로동신문』, 2023년 8월 22일, 5면.

2) 지역사회의 학교지원 사례 홍보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마다 차이가 심각하며, 그에 따라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도 지역마다 각양각색이다. 방송매체나 신문과 같은 미디어 또는 정기간행물로 소개되는 내용들을 통해 학교지원의 우수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정도로 학교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이런 사례들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도 덩달아 학교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꾀한 것이다. 학교지원에서 앞장서고 있는 기업소 단위나 지역일군, 학부모들까지 사례를 발굴하여 보여주고 뒤떨어진 지역, 후원단체들이 자극을 받도록 자극하였다.

각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학교지원은 액정텔레비죤, 컴퓨터, 태양빛전지판,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하여 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질적으로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물자들이다.[4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복도와 교실의 벽체, 창문, 출입문, 교사 내·외부의 직관판, 실험실습실 등 학교 보수를 해결해주는 지역(자강도), 산골분교에 필요한 목재, 시멘트, 책가방, 학습장, 연필, 텔레비죤, 녹화기, 증폭기와 교원들에게도 솜옷, 구두, 양복감, 치마저고리, 생활용품을 지원한 지역(황해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많은 지역이 소개되고 있다.[44]

또한 각 지역별로 학교지원을 우수하게 하는 단위를 선정하여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여주기 사업의 본보기로는 '교정별에 따르는 낮은급, 높은급 다기능화된 교실, 교내 국부망에 의한 교무행정 관리체계 개선, 현대화된 실험실습실, 깨끗한 교육환경' 지원 등이 속한다.[45]

북한이 대중매체나 정기간행물을 통해 학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교육 분야가 사회주의 건설의 후비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선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43)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 『로동신문』, 2018년 10월 27일, 5면.
44)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고," 『교육신문』, 2015년 3월 5일, 4면.
45) "새 교육강령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보여주기사업 진행," 『교육신문』, 2015년 5월 14일, 1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별로 계획을 수입하도록 변경되어, 교육지원과 관련된 책임은 지방인민위원회에 있는 것이다.[46] 국가의 '인민적시책비'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예산법」 제34조에 의해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인민적시책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원만히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조치에 따라 지출된다.[47] 지방인민위원회가 교육비 지출 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별로 교육비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몇 차례 물자지원을 한다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들 생활비까지 보장해주기는 어렵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학교에 교육비와 학교지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지정된 학교후원 단체들도 주인된 마음으로 담당한 학교의 실태를 수시로 알아보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부터 대책을 세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49]

3) 지역사회의 학교지원 실태

북한은 지역사회의 학교지원에 대한 국가적 요구와 교육비 지출 관련 지방인민위원회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의 역할은 국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 지역들마다 학교지원에 대한 성과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교육 분야에 몸담고 있었던 교사출신 참여자들의 진술은 북한에서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소재와 사례들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교직에 있을 당시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당 일군들이 배정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학교지원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또 도시 변두리 학교(농촌학교와 비슷한) 현장에서 근무했던 연구참여자도 지역사회의 학교지원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46) 현인애, "북한의 교육비와 교사충원에 관한 소고," 『평화통일연구』, 2호(2020), pp. 11-12.
47) 『북한법령집』 하(2022), p. 460.
48) "교육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실천으로 증명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19년 5월 27일, 4면.
49) "후원단체가 아니라 주인이 되여," 『로동신문』, 2018년 11월 28일, 5면.

담당 일군들이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특별히 눈에 띄게 달라진 교육환경도 느끼지 못했다.

> 그게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교육부문에 힘을 강화하고 하면서 뭐 당 일군들이나 일군들이 학교를 하나씩 이렇게 지명을 받아가지고 어느 학교는 내가 담당을 해가지고 니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학교 시설에 대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런 비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실습 나가고 제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서도 봤을 때 담당적인 지역일군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참여자A).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매우 형식적이며,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당 일군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차량뿐이고 주유비용이나 운전기사 점심식사 등 차량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는 결국 학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명목상 학교지원에 그치는 정도였다.

> 지원을 해라? 지원할 게 없어요. 뭘 지원할 거예요? 돈 줄 거예요? 돈 주라면 좋죠. 도에서 학교 교육단에 지원해라 하면 도당에서 도인민위원회에서 학교를 위한 하반년 예산 조정에서 학교를 꾸리는데 예산을 이만큼 돌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가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게 돈이 없는데 그냥 지원해라, 라는 좋은 정책만 선전하다 보니까 지원하라고 하니까 지원하라고 하는데 지원할 건 없어, 그를 쭉 보다가 예를 들면 학교 무슨 마당을 포장하는데 차 골재를 실어오는 차, 연류, 모든 게 지금 다 걸리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너무 속상하니까 교육부장이 군당 위원장에게 제기를 해요. 그러면 군당 위원장이 쭉 보다가 그래 어느 기업소 차 읍 중학교에, 어느 중학교에, 어느 소학교에 이틀 좀 동원시켜주라, 라고 가서 지시를 줍니다. 그러면 군당 위원장의 지시니까 네, 하고 차를 보내겠죠. 연류는 너네가 여기서(학교에서) 써라, 이틀 동안, (그게) 지원이죠. 보고서에는 지원으로 올라갑니다. 군당 위원장 동지의 2023년 7월 어느 중학교 어느 건설에 이런 이런 지원을 줬다, 그 소리에요. (참여자D).

> 가끔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무슨 어떤 공장 이런 데랑 이제 우리가 우리가 있는 학교에 주변에 회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학교랑 공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교에다가 뭘 도와주거나 이런 게 가끔은 있었어요. 명색 상은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참여자B).

반면 참여자C는 다른 참여자에 비해 지역사회 일군들의 지원 형태를 세부적으로 전했다. 참여자C는 근 20여 년을 학과목 교사로 학급담임을 하면서 재직하다가, 학급 운영에 필요한 물자나 자금 등 각종 부담을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걷어들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담임교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학교 행정직 경리원으로 업무를 변경하게 되었다. 과목 교사들과 달리 학교의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일군들을 만나게 되고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과목 교사들보다는 잘 알게 된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의 학교지원이 미미했기 때문에 모든 학급에 골고루 배분되기 어렵고 교장실, 연구실, 교무실, 실험실 등 학교 건물 보수와 유지에 일부 도움이 되는 정도에 그쳤다. 개별 학급은 학부모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담임 교사나 과목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교사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양복감이나 치마저고리 지원은 신문에나 소개되는 것일뿐, 주변에서 그런 사례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될 정도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담임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 OO시다 하면 OO시에서 공장 기업소들이 기관장들이 다 모이고 시당 책임비서와 교육부장이 앉아서 1개 학교당 4개 내지 5개 공장씩 맡겨줘요. 한 학교가 4개 내지 5개 공장씩 맡겨주면서 3월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학교에 지원해라, 그다음에 그 지원하는 정령을 가지고 총화를 또 지어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한 번씩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원하는 형태를 보면은 칠감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땔감을 지원하는 때도 있고, 나무, 그다음에 또 컴퓨터 한 대를 지원, 노트북 한 대를 지원하는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저 북한은 전기가 없으니까 햇빛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광이 있어야 되니까, 그 햇빛판을 지원하는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 햇빛판을 쓰자면 바떼리가 있어야 돼요. 그 바떼리도 지원하고, 자간 그런 걸로 이렇게 지원이 와요. 그리고 만약 내가 봄철에 지원을 못했다 하면 또 기관장 회의에서 두드려 맞아요. 왜 못했냐? 비판을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하고. (중략) 그러니까 직원들 관리하는 일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어디에서 무엇이 어느 만큼 들어왔다는 게 학교 경리원을 통해서 입고 되니까,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교원들은 모르죠. (참여자C).

지역사회의 학교지원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지역에서 후원한 것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있다. 물자든 돈이든 학교에 후원 명목으로 들어오면 이런 과정이 행정체계 안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진다는 것이다. 어느 단위에서 무엇을 학교에 지원했는지가 불투명하고, 학교 게시판에 공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를 후원을 해줬으면 일단은 교장이 알아서 그걸 꿀꺽해도 모르는 상황이고, 학교 게시판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고향은 영수증이나 이렇게 전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현금이잖아요. 뭘 해도 내가 학교를 운영을 해도 현금으로 사고 개인과 기업이 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사업자 이렇게 해갖고 국가도 증빙되는 서류가 따르는데 북한은 그게 안 따르니까 조금 불투명한 건 사실이죠. (참여자A).

나. 농촌 학교 방치로 인한 교육의 악순환

1) 농촌 학교지원을 위한 문제의식과 요구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농촌지역과 산간지역 학교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고 지역의 당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편향적 사고와 교육정책 관철에 대한 각오가 부족한 것으로 꼽고 있다.[50]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일군들이 농촌 학교에 자주 나가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촌 학교의 교원들도 농촌의 문화혁명 수행에서 열정과 재능을 다 쏟아부어야 하며, 정치실무 수준을 높이고 생활을 문화적으로 하는 데서 학생들과 농민들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었다.[51]

50) "현시기 교육부문에 나서는 문제와 전망목표," 『로동신문』, 2019년 8월 9일, 4면.
51) "농촌학교 교원들이 농촌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 『교육신문』, 2018년 10월 4일, 2면.

2021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농촌을 비롯한 시·군 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 있는 현실을 재차 인정하고 지방 경제와 지방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주목해야 할 필요를 상정하였다.[52] 지방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져야 교육지원에도 관심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시·군의 교육도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특히 농촌 학교는 시·군 단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당 대회의 전문을 통해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교원들이 돈을 털어서 학교 보수를 해야 되니까 보수를 안 하고 근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크잖아요. 애들이 크니까 이제 애들을 시켜서라도 이제 하는데, 작은 학교 이제 소학교나 그런 데는 좀 많이, 농촌학교 하면은 (중략) 애들도 (학생 수)작고 애들도 점점 줄어요. (참여자F).

2) 농촌 학교 운영의 문제

북한은 도시 학교와 농촌 학교가 따로 있어도 학생들의 실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본다. 따라서 지역일군들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53] 그러나 농촌뿐만 아니라 섬분교,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은 도시 학교들에 비해 교육환경이 매우 낙후하고, 학생들의 가정 경제 수준도 어려워 지역사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니 이런 학교들은 아무리 국가적인 지시가 하달되어도 지방인민위원회에서 받는 예산으로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방의 교육예산은 모두 국정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사 급여가 북한 돈으로 매월 2,300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옥수수쌀 1kg(2022년 혜산 기준, 2,850원)도 살 수 없다(참여자C).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받으려고 해도 해당 학교를 후원하는 단체들 자체가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5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로동신문』, 2021년 1월 13일, 1면.
53) "지역의 교육발전에서 무엇을 중시하였는가," 『로동신문』, 2023년 7월 17일, 5면.

또 학교에서 직접 물자를 구입하려면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거래하는데, 그러려면 학교도 자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교육부는 농촌 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형편이니 아예 검열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농촌 학교는 지역에서 방치되어 있고, 농촌 학교의 교육수준을 논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지역마다 학교의 운영 정도를 보면, 그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수준, 교육수준에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심에 있는 학교일수록 교육부 검열도 잦고, 교사들은 교수 준비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 학교는 워낙 형편이 어려우니 교사와 학생의 경제적·학업적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농촌학교는)관리가 안 돼요.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교장분들 보시면 그냥 배째라 하는 거죠. 뭐뭐 마른 하늘에서 무슨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시골 학교 같은 학교에 그렇게 검열을 온다고 하거나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냥 배 밖에 자식처럼, 그렇게 방치해서 가니까 계속 그게 그냥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에요. (중략) 시내 중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운영되고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하니까 모든 규율 같은 게 좀 세거든요. 있어요. 회의도 많이 가야 되고 교육부 회의도 많이 되고 검열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수안이나 이런 학생들을 같이. 그런 거로 말하면 제가 다니던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열이 자주 안 오는 거고, 교사들의 생활 정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자A).

> 농촌 가면 학교 회칠도 제대로 안 되고 외형상으로 하면 모든 게 초라해. 너무 빈약한 게 많아요. (중략) 그러니까 읍내하고 리 차이가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함경도 하고 평안도 차이도 심한데, 그 함경도 안에서도 읍내하고 리가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교사들의 삶도 생활도 힘든 거예요. 그 자처럼 잘 사는 부모들이 이렇게 막강한 후원도 해주면 되고 잘 살게 앞날을 좀 잘 가겠다고 이렇게 후원해 주는 그런 부모는 절대 없거든요. 리에 어쩌다 한 명 있는 게 뭐 리당비서. (참여자I).

2. 지역경제에 따른 학교의 교육 수준 차이

가. 지역사회 지원이 아닌 학교의 학생 수 중요

학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교육비 예산 지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 그 예산이 국정 가격이다 보니 학교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여자C는 학교 운영에 지출되는 예산이 100%일 때, 지방 예산 비율은 1% 밖에 안 되며, 나머지 99%는 학부모의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전했다. 지방예산 지출이 매우 미미하다 보니 교사들의 인식에는 학생 수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다. 그 학교의 학생 수로 학부모의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새 학기가 되면 학생 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 도시 중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음. 지방 예산으로 후원을 해놓고 그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학생 인원 수에 따라서 그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라서 선생님들 생각해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해줘서 우리 학교가 이만큼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은 안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A)

지역마다 간부들이 모여 사는 구역, 상인들의 밀집 구역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근처의 학교들은 고스란히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참여자B가 근무했던 학교는 간부들이 모여 사는 구역이어서 '자금력'이 나름 괜찮았고, 지역에서 상위 수준에 있었다. 이런 학교들은 지역사회의 지원이 없이도 학부모들의 권력과 지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시장 상인들이 밀집되어 사는 구역도 부모들의 경제력이 높아 학교지원이 좋고, 교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수준이 높았다. 시장 상인을 하는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열에 동참한다. 지역마다 자녀가 입학할 학교가 정해지지만 부모의 능력에 따라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54] 학부모들의 열성에 의해 자녀의 '몸값'이 결정되며, 그런 자녀가

54) 김혜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5권 2호(2019), p. 189.

다니는 학교는 교육환경이나 조건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참여자D).

> 학교가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 자금력 그 자금력은 이제 학생들이 한 채서 나오니까 우리는 학교는 자금력 하면 그래도 높지는 않았어요. 장사를 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조금 이제 간부라든가 그런 쪽으로 있어서 자금력 하면 한 3위 정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교육 종사자들의 어떤 수준, 교육 수준 그런 것도 1중학교 빼고는 그래도 그것도 한 2, 3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B).

> (학부모들의 열성이) 학교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공급원이에요. 학부형들이 자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 뭐예요? 경쟁률이 그만큼 많아요. 자기 자식을 내세움에 있어서 기존처럼 잘 입히고 잘 먹인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한번 표창장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느 대회에 갔다, 라는 이런 사회적인 명예감을 함께 씌워주는 씌워주는 게 부모들로서 제일 큰 거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학부형들이 보이지 않는 밑에서 자식들이 학업 성적을 가지고 경쟁이 아니라 밑에 학부형들이 경쟁에 의해서 자식들의 몸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가 좋은 거죠. (참여자D).

> 그냥 학교 운영을 학부모들 힘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시스템이지. 그렇게. (참여자F).

북한의 지역사회에도 정치적 신분이 높거나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부모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은 자녀 교육을 위한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출신성분이 좋은 집안은 부모의 대를 이어 자녀를 간부로 키우기 위한 진로를 설계하며, 상류층 부모들도 성분에 따라 진학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고 자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55]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대학을 졸업해도 농촌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자녀가 사범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졸업하면 다시 자신의 고향인 농촌으로 배치받을 확률이 높다. 농촌 지역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 일단은 사람이 많이 밀집돼서 사는 공간 안에서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 그 경쟁

55) 조현정,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제53권 4호(2022), pp. 121-121.

> 이 이제 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 그리고 내 자녀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해서 나중에 간부로 키우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시골이면 시골 이런 학교들에서 내 아버지가 엄마가 농장원이에요. 농장원인데 나는 그러니까 너는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갔다 왔자 너는 농장이야, 해서 사실 안 할 수도 있고 관심이 그래서 내 신분 정해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참여자B).

교육 분야에도 시장논리가 도입되어 이제는 학부모-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 교육소비자인 학부모-학생들에 의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수준 차이가 발생한다. 즉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은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56]

나. 도시와 농촌 학교의 학부모 의식 차이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격차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도 존재했다. 이는 국가와 시대를 넘어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다.[57] 북한도 시장화 이후 시장논리가 주민들의 모든 일상에 자리 잡게 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전반에 의식 변화를 통한 욕구가 분출했다. 이는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갖춘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미래에 더 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반면, 힘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고리가 차단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나 물자지원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자녀를 내세우고 싶다 하면 거기에 자발적으로 지원”(참여자F)하는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중등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담임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진로에 필요한 스펙(학급 열성자, 상장 등)을 만들어 간다. 아예 초등학교 입학 전 3~4세 경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예능교육과 한글, 영어를 사교육으로 가르치면서 교육투자가 시작된다.

> 그게 솔직히 애를 저처럼 자녀가 둘인 집이 드물어요. 다 하나씩밖에 안 낳거든요. 생활이 힘들고 자녀한테 이렇게 힘겨운 거를 이제 넘겨주고 싶지 않으니

56) 김혜진, 위의 논문, p. 190
57) 김종두, 위의 글, p. 173.

까 이제 애 하나씩만 낳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씩만 낳으니까 귀한 거예요. (중략) 애한테 엄청나게 이제 막 투자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투자하는 게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지금 3살, 4살 때부터 그런 사교육을 많이 시켜요. 피아노 배워주고, 바이올린 배워주고 이제 국어 배워주고 한글이랑 영어 말이랑 그런 걸 배워주면서 어릴 때부터 사교육 엄청 많이 시켜요. (참여자F).

이렇게 취학 전부터 도시지역의 부모들은 자녀의 기초교육부터 예능교육까지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열정을 쏟지만, 반면 농촌지역의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한 생각은 쉽게 포기한다.

그러니까 시내 중심학교에 사는 학생들은 이제는 너무나도 보고 자란 세상이 그거다 보니까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지도원 자리라도 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살다 보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몰두해서 학교에다 좋은 대학을 추천받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열성을 내는 거고, 부모님들이 더 활약을 하는 건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같은 거는 바로 안 보니까 그냥 그게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참여자A).

대신 경제력이 없거나,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학교교육에 관심이 없다. '이름 석자 쓸 만큼'만 배우면 그만이다(참여자A). 농촌이나 해변·산간지역은 자녀가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아오고, 버섯과 나물도 따올 수 있어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의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니, 외진 지역의 학교일수록 운영에 차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농촌 지역의 부모들 자체가 "애들을 막 공부시키려는 부모들의 욕구가 낮고"(참여자F) 의식 수준이 낮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아예 학교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는 나날이 쓰러지고 나날이 계속 내려가고 하는데 그 시골에서 그 학교에 다녀봤자 내 아들이 대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들 말을 들어보면 그냥 니 이름 석자 쓸 만큼만 배워라.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았어요. (참여자A).

우리 제가 한 데는 교원에 대해서 야 우리 내 자식을 좀 봐주시오, 이게 없었

어요. 좀 덜 깨다니니까. 시내보다 좀 덜 깨다니니까 거저 (학교)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 다음에 신발이 없으면 가지 말라. 바지 없으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참여자C).

이처럼 도시와 농촌지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극명한 의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 교육에서 의식 차이가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육이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력이 교육성장의 필수요인이 되는 역행을 하고 있다. 지역별 경제력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교육수준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결국 경제력을 갖춘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깊이 관여하며,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다.

내가 먹고 살기 편해야 이제 자녀에 대한 관심도 주고 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심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들 경제력이 뭐 안 좋다고 해서 자식한테 관심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죠. (중략)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래서 자녀를 이제 대학 공부 시켜서 신분 이거 체인지를 하려고 공부를 잘 시키는 시골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보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상황으로 따져봤을 때 먹고 사는 게 어쨌든 농촌은 도시보다 어렵잖아요. 나가서 육체적으로 이제 밭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아침에 학교를 갔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관심을 잘 못 돌릴 수도 있고, 니가 가서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에서 뭘 했는지, 오늘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뭔지,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관심을 못 주죠. 그래서 일단은 그 베이스는 경제고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죠. (참여자B).

Ⅳ. 북한의 교사-학부모 차원의 도·농간 교육격차 실태

1. 교사-학부모 접촉 빈도에 따른 상호 의존 양상

가. '내 자녀를 잘 내세우고 싶은' 부모의 욕구

북한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일수록 자녀를 한 명 이상 출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자녀가 한 명이면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또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를 먼저 찾아가 학생 간부(열성자)를 제안하기도 한다. 학부모와 교직원들 간의 필요 요구에 따라 경제력있는 학부모는 자녀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학교의 교직원들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며 상호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역에서 큰 가게를 운영했던 참여자F도 자녀가 다니던 학교의 '소년단지도원'이 찾아와 단위위원장 추천 제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학교 측에서도 학생명단을 받으면 부모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과 경제력 등을 먼저 조사하고, 그런 부모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 소년단지도원하고 되게 가까웠었고, 교장이랑 부교장이랑은 뭐 저희가 살던 곳에서 제가 장사랑 좀 하고 좀 이제 저희 애들 이름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참여자F).

경제력이 좋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학교의 교직원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자녀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적극 받아들인다. 교사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을 좋아하고 그 관심을 자신의 필요로 이끌어내며 부모들과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한 학급에서 이렇게 자녀에 관심을 집중하는 학부모는 5%(주로 학급 열성자들)정도에 그친다(참여자F). 그 5%에 속하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급 운영과 담임교사의 생활비까지 대부분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 담임교사의 경조사나 생일까지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값비싼 선물, 음식까지 준비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 담임선생님은 많이 이제 너무 가깝게 이제 막 지낼 정도로 담임 선생님한테는 많이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줬죠. 교장 선생님이나 부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산 때나 한동일 때나 그럴 때나 한 번씩 관심 주면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하고는 밀접하게 계속 연결을 했었죠. (참여자F).

> 어쨌든 그 안에서 무슨 열성자라는 게 있잖아, 학급에. 그것도 간부집 애들, 잘사는 집 애들이 많이 하지. 학교 꾸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할 때, 저기는 학부형들이 돈을 내서 학교를 꾸리고 최상급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참여자E).

> 교류가 엄청 많죠. 저는 느낀 게 이런 거를 부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략)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완전 학부형들이 다 왔는데 엄마들이 다 왔는데 학급장 그다음에 분단 위원장 무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엄마들이 해온 이런 선물을 보면 진짜 우리가 쉽게 살 수 없는 한국에서 나오는 화장품, 그다음에 선생님 손목 시계 선물로 가지고 오고, 가보니까 음식을 차렸는데 학부형들이 음식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음식은 돈 모아서 다 해왔더라고요. 근데 완전 진수성찬인 정도가 아니고 연회 수준으로 차린 거예요. (참여자H).

이 외에도 학부모들의 '내 자녀를 잘 내세우고 싶은' 욕구는 자녀가 학급 열성자가 되었을 때 더욱 표출된다. 그들은 자녀의 학교교육을 위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지출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교사들이 월급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헤아리고 있으며, 또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 공간과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그만한 보상에 대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 분단 위원장 시키면은 중국 돈으로 300원 매월 300원이면 너무 크잖아요. (중략) 그다음에 학급 반장 200원, 그다음에 위원들 있잖아. 분단위원들 이제 그걸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분단위원들 우리 때만 해도 위생 담당이요, 체육담당, 학습 담당해서 3명이었잖아. 그럼 총 7명이야. (중략) 다른 위원들은 100원씩.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지. 근데 선생님도 그거 어떻게 안 된다고 못하는 거예요. 부인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학교 나와서 애들 살려야 되는데 나라에서는 돈 없지 하니까, 결국은 부모들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고여서라도 내세워주지. 공부를 배워주는 수업이라도 안해 주겠냐? 내가 애를 여기다 맡기고 난 내 장사를 하는데, (중략)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애들을 맡겨주고 애들 맡아준다는 그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거죠. (참여자G).

나. 담임교사-학부모 접촉 빈도의 변화

북한에서는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를 방문할 때 옷차림을 깨끗하게 절제된 자세로 찾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그런 분위기였다. 경제난 이전에는 자녀의 성적 총화로 일 년에 두 번 정도 학부모 회의가 열릴 때가 교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었다. 담임교사들이 학생 교

양을 위해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를 빼고는 교사나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일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학부모의 정치적 권력과 경제력은 학교와 교사로부터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에서 자녀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모는 그 이상으로 교육공급자인 학교나 교사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이런 구조에서 북한의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잦은 접촉을 시도한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 어머니들 하고, 좀 필요하다 할 때 아빠들을 이제 찾거든요. 굳이 집에도 자식에게 부모 중 양부모 중에서도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빠냐 엄마냐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집은 아빠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집들도 있고, 대다수 집들은 엄마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들과의 접촉은 기존하고 달리 제한이 없이 진행이 돼요. 이제라도 전화 하고프면 전화하고 전화 오고프면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상 이제 통신이 좀 발전되다 보니까, 도입이 되다 보니까 학부형들에게 선생님도 자유롭게 전화를 하고 또 학부형도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전화를 하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접촉은 자주 있다. (중략) 기존에는 교사라 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벽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좀 어려움이나 간격을 서로 유지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학부형들이 자세를 낮추고. 선생님이다, 라는 차원으로. (참여자D).
>
> 학부모들이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대하는 거를 어렵게 대하지 않아요. 그냥 친근하게 대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참여자F).

최근 북한은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휴대폰 보유량이 많아 도시 학교의 교사들도 휴대폰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친척 간 소통이든, 장사를 위해서든 전화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흐름이 되다 보니[58] 당연히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도 휴대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교사-학부모 사이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지속되면서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도 한다. 이제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적인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토로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한 학부모들도 어려움 없이 교사와 소통한다. 물론 교사-학부모의 인간

58)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pp. 33-34.

적인 관계 역시 부모의 경제력을 전제한다. 교사-학부모의 인간관계는 서로의 필요가 맞닿아 있지만, 교사에게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학부모들이 생계를 책임져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리한 교사들은 학부모들 중에 경제력이 좋은 학부모 3~4명 정도 수시로 부탁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 필요하면 우리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사람한테 연락을 하죠. 아니면 얘보고 너 내일 어머니 이제 한번 좀 오시라 해라, 그러면 찾아와요. 학교에 엄마든 아버지도, 무슨 일이냐?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이런 일하는데,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요즘 살기도 힘들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도와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죠. (참여자B).
>
> 이제는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인간적으로 각각 가까운 그런 학부형들이 3명 4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도 살아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부탁해야 될 게 있잖아요. 나 지금 기름 떨어지는데 먹을 기름 좀 한 통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학교에 제기되는 문제만 풀어주는 게 빨간색들이 아니거든요. 앞에 보이는 건 그것이고 사실은 그 뒤 있는 뿌리가 더 깊어요. 이게 사생활적인 거. 이제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이 임명이 돼요. 그 선생님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웬간한 학교들을 쫙 다 빨아가요. (참여자D).
>
> 선생님들도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나 뭐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그런 걸 도와주거든요. 그런 부탁을 안 하면 그냥 이제 계기점 맞춰서 선생님한테 이제 뭐야 그냥 현금으로 담임선생님 북한 돈은 좀 그러니까 중국 돈 있잖아요. 중국 돈으로 이제 주거든요. (참여자F).

2.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사 역량 차이

가.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사 자격 문제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농촌 학교에 배치 받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 북한 당국은 2016년부터 졸업생들을 3년 동안 '현실체험'을 의무적으로 강행하였다. 그리고 '산골분교의 교단을 지켜선 어머니와 딸'과 같이 산골 외지 교원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59] 그러나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농

59) "산골분교의 교단을 지켜선 어머니와 딸," 『로동신문』, 2023년 7월 19일, 4면.

촌 학교의 교육환경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농촌에 배치받는 것을 꺼린다. 이에 북한은 2016년부터 사범대학 졸업생들을 의무적으로 농촌 학교에 현실체험 기간 동안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 기간이 끝나기 바쁘게 도시 지역으로 배치지를 옮긴다. 그러니 농촌 학교는 교사가 늘 부족한 상태이다.

> 옛날에는 교원들 인격 다 보고 또 면접 보고 대학 자격증 다 보고 이렇게 시켰는데 이제는 너무 교원의 수가 없으니까 교원의 수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교원)양성반 자격증만 있으면 그냥 시켜요. (중략) 시내 학교 교원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대학졸업 자격증은 다 있어요. 시내는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격증 있는데, 농촌 학교에는 너무 교원이 모자라 니까 양성반 6개월 끝나는 동시에 학교에 배치가 돼 버려요. 그게 학교 담임까지. (중략) 교장 부교장도 학급 담임할 정도로 교원이 모자란대요. (참여자F).

> 제일 간부하기 편안한 게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이에요. (중략) 교원을 하면서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당 일군, 검찰소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원 진영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와 같은 경우는 전문 교육 고등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교원양성소라는 걸 만들어 놓았어요. 몇 개월 속성 교육을 주고 교원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참여자D).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4년제 과정에서 교육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졸업 전에 학교에 나가 '교생실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친다. 그러나 농촌 학교는 6개월 과정 '교원양성반'을 졸업한 교사들이 대부분 배치된다. 농촌 학교의 부족한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교원 양성 기간을 단축하여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의 질적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원의 자격 문제에서 교원 수급의 미달과 '무자격' 교사, 교사의 이탈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나.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사 자질 문제

농촌 학교들의 열악한 실정을 파악한 북한 당국은 도·시·군 '교원재교육강습소'를 비롯한 교육 단위에서 교종별로 우수한 교원들을 선발하여 농촌 학교에 파견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최대한 좁혀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변화와 진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60] 도시 중심의 교육수준이 높은 학교들에서 농촌 학교를 하나씩 맡아 우수 교수방법과 수단을 일반화하고 교수합평회, 새 교수방법 창조 등을 통해 농촌 학교 교사들의 자질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61]

그러나 농촌 학교의 교육환경과 조건을 도시 학교들처럼 현대적으로 조성하고 교사들의 생활수준까지 보장하는 일은 몇 명의 우수 교육자 파견이나 교수방법 전수, 컴퓨터 몇 대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농촌 환경의 경제적인 낙후성과 학부모들의 경제력이 도시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촌의 교육수준과 교사의 자질 문제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북한의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사 배치에서의 문제는 교사의 자질과 교육의 질적 문제로 이어진다.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질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학교의 교육수준과 교사의 교수방법, 교육심리학 측면에서 학생들을 교양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도시에 비해 농촌 학교 교사들은 교육의 질도 문제이지만 초보적인 상식도 모른다는 비난이 따른다. 새로운 교재가 배포되어도 농촌 교사들의 교과 지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크다(참여자I).

>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그 배워주는 교사들 자체의 질도 너무 한심해요. 지금 진짜 교원들 중에서 옛날 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 한 명 정도나 있고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나 있으면 있을 정도, 그냥 제가 살던 지역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생님들이 대화를, 우리 딸 담임이 이제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더라고요. (참여자F).

> 도시는 그래도 학교 자체도 크고 이제 애들도 많잖아요. 그 학교 가는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 하면 학교 왜 안 왔냐 이제 선생님들이 연락도 하고 애들도 보내기도 하거든요. (중략) 농촌은 농사철에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농사를 같이 도움을 이제 애들한테 받고, 그러니까 이제 농촌학교 같

60) "각지의 우수한 교육자들이 농촌학교를 찾아간다," 『로동신문』, 2022년 3월 5일, 2면.
61) "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당적지도에서 틀어쥔 두 고리," 『로동신문』, 2022년 3월 2일, 2면.

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애니까 그냥 조선글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냥 그때만이라도 학교 가, 이런 그런 무의식적인 의식, 의무감 그런 걸로. 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도 애들하고 같이 장난치고. 시내 학교하고 농촌학교하고 교육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도 많이 달라지고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참여자E).

일단은 교육의 질이고, 네. 교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략) 다 농장 자녀들 대학을 안 나온 농장 자녀들이나 이제 그런 직업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계급 혁명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교원을 하거든요. 교원대학도 안 나온 애들이. (참여자H).

농촌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 학교들 중에도 국가에서 '교육 혁명가', '직업적 혁명가'라는 명분 아래 학교 과제도 많고, 교육조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환경에서 교육의 요구성만 높아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도 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당 일군이나 보위부, 검찰소 등 사회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이탈 문제는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속성 교육(교원양성소)을 받은 사람들이 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 하겠죠? 그저 반동사상만 배워주지 말아라, 이거 다 해요 19살, 학교 졸업한 18살 처녀가 19살에 교원양성소 갔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20살쯤에 교원 임명받고 가니까. (중략) 그런 차원에서 기존과 달리 일단 교육 역량과 질이 너무도 열악하게 약해졌죠. (참여자D).

Ⅴ.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한 탐색적 의미

1. 교육개혁의 근본적 문제: '도와주는 관점'의 학교지원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체제를 보존하는 동시에 인재강국 건설의 중차대한 사안이다. 선대 정권에 이어, 특히 김정은 집권 후 교육정책의 특징은 국가발전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첫째, 21세기 교육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세 세기 교육혁명'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실천

형 인재 육성, 중등일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교수매체 멀티미디어화, 컴퓨터화 인터넷 기반 교육, 창의적인 교수방식과 학습환경 개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교육매체의 개발 등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경험을 북한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 교육 분야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 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다.[62]

이렇게 중차대한 북한의 교육혁명은 현재 각 지방인민위원회의 '인민적시책비'에 해당하는 교육비 계획과 지출 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교육혁명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가의 교육재정 배분이다. 국가의 교육재정이 마련되어야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그 토대 위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인민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예산 지급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실제로 지방인민위원회에서는 교육 기자재와 실험기구들, 교원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물품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방인민위원회에서 교육비 예산을 국정가격으로 지급받고, 시장가격으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 생활을 보장해주기에 인민적시책비 지출은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육 기자재, 교육 기자재에서 또 물품들이 나오는 거 있어요. 교육에 필요한 물품들이. 그래 거기 가서 우리가 전표를 가지고 그 돈을 주는 거기에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 기자재에 가서 예산을 들이 밀어가지고 무슨 기타, 무슨 매트, 여러 가지 실험 시약들, 그 다음에 기구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와요. (중략) 교원생활비는 한 달도 미결이라는 게 없이 꼭꼭 지급돼요. 그런데 그것이 작아서 쓸모가 없어서 그러지. (참여자C).

지방인민위원회의 교육비 예산이 형편없다 보니, 교육부에서 학교지원 기관을 배정한다. 학교마다 지역사회의 기관·기업소 일군들을 배정하여 학교지원 사업을 강화하며, 후원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별로 지역사회의 당

62)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2015), pp. 15-17.

일군들이 책임지고, 한 학교당 4~5개 기업소가 후원단체로 지정되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다(참여자C). 그러나 지방의 기관·기업소의 경제적인 실정도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학교지원에 대한 전국의 지역사회 사례들을 홍보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나마 도시를 중심으로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 있는 부모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그들의 힘에 의해 학교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는 학교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주의 국가 발전의 사활이 걸린 교육개혁을 이렇게 '도와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선전하고 있는 학교지원은 모두 '우리도 주인이라는 관점'이나 '진심으로 도와주는 기풍'에 중점을 두고 있다.[63]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도·시·군 지역 일군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당이 제시한 교육의 총적목표를 달성하자면 전사회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도, 시, 군을 비롯한 각 지역 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육기관들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로동신문, 2021.4.26.).

'도와준다'는 말은 "남의 일이 잘되도록 거둘거나 힘을 보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 힘을 보태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중앙과 도시, 지방과 농촌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 물품을 공급하고 교사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전에는 교육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생각이다.

63)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해 이들처럼 품을 들이자," 『로동신문』, 2017년 2월 3일, 4면.

2. 지역 간 불평등 문제: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감소

북한의 지역 간 빈부격차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인구변화와 지역별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사회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 기업 및 산업 편중, 사적 경제활동의 발달, 중국과의 연계,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지역별 차이는 계층별 빈부격차로 귀결된다.[64] 계층별 빈부격차는 곧 학부모의 빈부격차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정책과 시스템은 도시와 농촌 학교에 똑같이 전달되지만 학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 운영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에서, 교사의 생활에서 극명한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력 있는 부모일수록 교사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취하는 반면, 지방과 농촌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다.

> 전체적인 정책이나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거는 같아요. 차이가 나는 건 학부형들 그 지역 사회의 생활 수준의 차이입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농촌에 사는 농촌 학교의 학부형이 선생님에게 고이는 것은 옥수수 삶아서 한 보자기를 갖다 고인다면 도급에 사는 학부형이 선생님에게 고이는 거는 옥수수가 아니라 기성 옷을 한 보따리 싸서 갖다 고이는 거예요. 평양시에 올라서 평양시 외국 왔다 갔다 하는 학부형이 선생님에게 고이는 거는 내가 외국 나갔다 오는데 3개월 동안 우리 아이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딸라를 갖다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은 똑같고 생각은 똑 같은데 그 학부형들과 지역사회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 질적 수준과 거래 대상, 거래 방식은 같은데 거래의 량에 관계된다, 그러니 뇌물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도시 학교의 교장 수준과 옥수수가 삶은 옥수수가 보따리로 들어오는 농촌학교의 교장 수준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회의 참가하면 시급 선생님은 피스 담배를 필 때 군급 선생님은 고양이 담배를 피고, 리급 선생님은 마라초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건 학부형들의 차이입니다. 지역의 차이고. (참여자D).

> 국가가 못 살면 그게 자기들만의 개개인 변화를 하려고 개개인들이랑 또 머리가 터서 뭔가 이렇게 태양열 그것도 그거 뭐야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 태양광 그것도 많이 사다가도 넣고 하는데, (농촌)거기는 아직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또 사다가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근데 뭐 경제적인 모두가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참여자I).

64) 임을출, "북한의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2016), p. 120.

북한은 현재 명목적으로 '무상교육'이지만, 실제 학교 운영이나 교육에서 '실질적 유상교육'으로 변했다.[65] 학생들이 부담하는 각종 과제(토끼가죽, 파철, 장갑 등)와 학교 꾸리기에 필요한 시멘트, 페인트 등 자재를 돈으로 모두 해결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기 학교마다 교육 현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교사는 "나누기를 잘 해서, 분담을 해서 받아내"려 하고, 빈곤계층 학생들은 학교에 낼 돈이 없으니 등교를 거부한다(참여자C).

또한 취약계층의 교통 문제가 열악하다. 농촌도 문제이지만, 더 외진 산골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통근 거리가 1시간 이상 되니 결석하는 일이 잦다. 결석이 잦으니 교과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며, 문해력도 매우 낮다.

> (농촌에는)자전거 길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시골이니까 시골에서도 산골이잖아요. 저게 평안도는 시골이라도 그런 산골은 없어요. 근데 심심산골에서 등교하는 애들이 뭐 1시간 이상이더라고요. 다 등교 거리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애들도 더 많고. (참여자H).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 차원의 세 요인 간 상호 인과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학교-지역사회, 교사-학부모의 인과적 관계는 시장화 진전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교육 사회 안으로 침투되면서 교육불평등으로 직결되었다. 또한 국가 교육재정 투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각 지방인민위원회의 인민시책비에 의존하는 교육비 지출은 사실상 국가의 교육개혁 의도를 실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교육지원 해결책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기관·기업소에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역 일군들의 교육관심도, 지원 규모, 종류, 방법적인 면에서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학교지원 정도가 미미하며, 실제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학부모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이다. 경제적 능력을 갖춘 학부모들의 학교 개입은 담임교사와 학교 행정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자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서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65)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173-176.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에 대한 탐색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중차대한 교육개혁 문제를 '도와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지원에 대한 도·농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 북한은 교육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지역사회의 당 일군들과 후원기관에서 학교지원을 당의 뜻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달해도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인민위원회의 '인민적시책비'에서 산출된 국정 교육비로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둘째, 지역 간 불평등 문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가 감소되는 문제에 심각하다. 돈과 권력이 있는 극소수의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하류층들은 교육 기회를 잃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을 양산해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감소는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도·농간 교육격차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지역사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은 도·농간의 경제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하게 전변'하는 것을 국가의 최중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지방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사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수록 격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국제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지역 격차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취약계층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농촌과 산간, 해변 지역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학교와 학생에 초점을 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준비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위한 교육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교육개혁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환경과 교수방법 개선 문제, 교사 양성 및 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류차원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교류 협력은 통일과 남북한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점진적 과제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참고문헌

가. 단행본

김병성. 『교육사회학: 학교 사회-문화 분석, 3판』. 서울: ㈜학지사, 2021.

김수암·김국진·김영윤·임순희·박영자·정은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김종두. 『교육사회학, 3판』. 파주: 교육과학사, 202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8.

박영자·조정아·홍제환·정은이·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박영자·박형중·현승수·정은미·황진태·황태연·김화순·홍찬숙·김신규·최은주·명수정·박민주·최선경·박치현·조은성.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서울: 통일연구원, 2022.

성채기·김진무·정상돈·탁성환·손효종. 『북한 경제 규모의 대안적 추계와 불평등의 실상』.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4.

조정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 민·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조정아·서재진·임순희·김보근·박영자. 『일상생활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조현정. "북한의 계층구조에 따른 교육격차 요인과 실태."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김정은 체제 10년, 새로운 국가 전략』.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22.

최규빈·박환보·이요한.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불평등과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21.

허은주·유현정·이수진·안영화·배석영. 『현대 교육사회학』. 파주: 양서원, 2021.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ition.*(2013).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질적 연구방법: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8.

나. 논문

김혜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5권 2호, 2019.

이용희. “북한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실태.” 『통일전략』. 제21권 3호, 2021.

임을출.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 2016.

조정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와 교육의 불균등 발전: 2000년대 북한 교육의 변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7권 4호, 2007.

조현정. “북한 교육에서 사교육 활용의 양상과 그 의미.” 『교육과학연구』. 제53권 4호, 2022.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최완규·노귀남.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현대북한연구』. 제11권 2호, 2008.

한영진. “북한의 사회계층과 의식 변화: 식량난 이후 두드러진 북한의 핵심계층 변화.” 『北韓』. 425호, 2007.

현인애. “북한의 교육비와 교사충원에 관한 소고.” 『평화통일연구』. 2호, 2020.

다. 기타자료

북한법령집 (2022) 하.

『교육신문』. “학교지원과 애국.” 2015년 3월 5일, 1면.

『교육신문』.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고.” 2015년 3월 5일, 4면.

『교육신문』. “새 교육강령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보여주기사업 진행.” 2015년 5월 14일, 1면.

『교육신문』. “인재와 학교지원.” 2016년 3월 10일, 1면.

『교육신문』. “학교지원사업에 적극 떨쳐나.” 2017년 6월 29일, 1면.

『교육신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17년 9월 14일, 1면.

『교육신문』. “농촌학교 교원들이 농촌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 2018년 10월 4일, 2면.

『로동신문』.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해 이들처럼 품을 들이자.” 2017년 2월 3일, 4면.

『로동신문』.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이 중요하다.” 2018년 10월 27일, 5면

『로동신문』.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 2018년 10월 27일, 5면.

『로동신문』. “후원단체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2018년 11월 28일, 5면.

『로동신문』. “교육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실천으로 증명되여야 한다.” 2019년 5월 27일, 4면.

『로동신문』 “현시기 교육부문에 나서는 문제와 전망목표.” 2019년 8월 9일, 4면.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2021년 1월 6일, 1면.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2021년 1월 13일, 1면.

『로동신문』. “교육혁명수행과 일군의 역할.” 2021년 1월 21일, 1면.

『로동신문』. “지역의 교육발전과 일군들의 역할.” 2021년 4월 26일, 4면.

『로동신문』.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2022년 2월 9일. 1면.

『로동신문』. “교육의 질개선을 위한 당적지도에서 틀어쥔 두 고리.” 2022년 3월 2일, 2면.

『로동신문』. “각지의 우수한 교육자들이 농촌학교를 찾아간다.” 2022년 3월 5일,

2면.
『로동신문』.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다.” 2022년 6월 10일, 1면.
『로동신문』. “지역의 교육발전에서 무엇을 중시하였는가.” 2023년 7월 17일, 5면.
『로동신문』. “산골분교의 교단을 지켜선 어머니와 딸.” 2023년 7월 19일, 5면.
『로동신문』. “초등 및 중등교육의 강화는 인재강국 건설의 지름길.” 2023년 8월 22일, 5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년 6월.